



광주형 AI-그린뉴딜로 2045 탄소중립 선도

광주시

3대 전략·8대 핵심과제 제시
작년 6개 부문 94개 사업 진행
상반기에 1년 목표 72.5% 달성
올해 3월 감축 계획안 도출 예정

전국 최초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을 선포한 광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 장기저탄소 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골자로 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앞서 같은 해 8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실현을 공표했다.

2045년 광주시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은 823만 6,800톤으로, 2030년 372만 6,000톤(45%), 2040년 634만 2,000톤(77%) 감축을 거쳐 2045년 탄소중립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3대 전략·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시민 모두가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전환도시' ▲미래형 환경융합산업 메카 '녹색산업도시' ▲누구나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후안전도시' 등이다.

8대 과제로는 ▲시민 주도 녹색 분권 실현 ▲녹색 에너지 확대 ▲녹색 인프라 확충 ▲기후안전 녹색인프라 강화 ▲AI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 ▲깨끗한 물환경 인프라 구축 ▲정정대기·공기산업 등 환경융합산업 육성 ▲기후환경일자리와 시민참여 확산 등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탄소중립 시행 첫해인 2021년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00만톤(시추진사업 75만 8,000톤, 공동체사업 24만 2,000톤)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광주시 온실가스 감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구 라봉웨딩홀에서 (재)국제기후환경센터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21년 광주 에너지전환의 날' 행사에 참석해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김광관 위원장과 장연주 부위원장, 유관기관장, 마을 활동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축량은 55만톤으로, 올해 감축목표 75만 8,000톤 72.5%를 달성했다.

광주시는 ▲에너지전환 ▲건물 ▲수송 ▲공공·자원순환 ▲농축산 ▲흡수원 등 6개 부문에서 94개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부문별로 에너지전환 부문에서는 목표량 23만 900톤 대비 12만 1,000톤을 감축해 52.5%의 달성률을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운영, 공공기관 에너지자립 기반 강화, 재생에너지 연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이 주요 성과다.

건물 부문에서는 목표량 17만 4,300톤 대비 10만 4,500톤을 감축해 59.9%를 달성했다. 시민참여

여 기반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운영,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정책 추진 등을 중점 추진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목표량 14만 8,900톤 대비 12만 4,200톤을 줄여 83.4%의 감축률을 보였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이 진행됐다.

공공·자원순환 부문에서는 목표량 5만 5,900톤 대비 5만 3,800톤을 감축해 96.5%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 자원순환 기반 조성 등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다.

농축산 부문에서는 목표량 1,700톤 대비 1,100톤을 감축해 66%의 실적을 보였다. 채식 실천을 통

한 온실가스 감축,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흡수원 부문에서는 목표량 14만 6,800톤 대비 14만 4,800톤을 줄여 98.7%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광주시민의 숲 조성 운영, 산림 가꾸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내 수목 관리 등 생활 속 탄소흡수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목표량 달성 50% 미만인 사업은 25개로, ▲상반기 협약체결·공모 등 추진을 하반기 준공 예정 5개 ▲사업검토 및 행정절차 등 진행 중 5개 ▲하반기 실적 제고 필요 13개 ▲기타 2개 등이다.

광주시는 현재 지난해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 실

적 등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는 이달께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탄소중립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실국별 추진 실태와 개선점 등을 보완하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 건의사항 등을 취합해 오는 3월께 2022년 탄소중립도시 추진계획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탄소중립 계획 추진 첫해 시민과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준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과 시행착오는 개선함으로써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 행정력 모은다

전남도

지난해 3월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비전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전남도가 탄소중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의 4대 핵심 전략은 ▲청정 에너지 ▲산업 ▲생활 ▲산림 등이다. 이를 통해 2017년 기준 전남의 탄소배출량 9,200만톤을 2030년까지 30.5% (2,800만톤)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2,600만톤,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부문 탄소감축으로 3,600만톤, 수송·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으로 400만톤, 농수축산 스마트화로 200만톤, 50년까지 5억 그루 이상 나무 심기 등 시민 실천운동으로 2,400만톤 등 온실가스 배출량

는다는 목표로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2,500개의 지역별 특색에 맞는 테마형 도시 숲을 조성 중에 있다.

도민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대와 도민참여 유도를 독려하기 위해 탄소사랑꾼 운동, 탄소포인트제 가입, 대중교통 이용, 장바구니 사용 등 도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2030년까지 4대 핵심전략에 10대 과제 102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75조 3,000억 원이다.

도는 핵심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2050 전남도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전남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캠페인 시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시·군,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4대 핵심전략에 2030년까지 75조 투입 온실가스 센터 설립·위원회 구성 잔결음

9,2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청정에너지 전남으로 전남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2040년까지 도 전력소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2040 전남도 RE100, 신재생에너지와 기술 개발을 통해 블루·그린수소 기반 수소경제를 선도한다.

청정산업 전남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폐쇄, 스마트 그린산단과 RE100 전용산단 조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하고 미래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기반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제로 인증제·그린리모델링을 활용한 탄소제로 건물 확대, 농수축산 분야에서 ICT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2050년까지 5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

과 함께한 '탄소 중립 주간' 행사에서는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2050 탄소중립 온맵시 자랑 ▲도시만들기 시민 토크회 ▲그린터치 사용 선언식 ▲대중교통 및 출퇴근 버스 한번이상 타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등을 펼쳤다.

광역 도단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비전을 선포한 전남도는 도민이 참여해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을 실천하는 탄소사랑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도민의 인식 전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선언한 탈석탄동맹(PPCA), 세계 지방정부 공동결성단체인 글로벌 기후에너지시장협약(GCoM), 기후환경 및 지속가능 도시단위 연합체인 도시환경협약(UEA)에 가입했다. UN 레이스투제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국의 정부와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체계를 구축



지난해 3월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2050 전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장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참석자들이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한 것도 현재까지의 성과로 꼽힌다.

향후 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광역센터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계 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위원회를 올해 초까지 구성해 에너지, 산업, 건물, 순환경제 등 해당 분야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도민 실천운동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활용할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조성해 ▲기후대응 교육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투입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탄소중립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로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 실천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일상 속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거라 확신한다.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